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2026. 11. 23.
No. 1090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임재만
www.krihs.re.kr

이 브리프는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든 생분해성 펄프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유희연 부연구위원
김찬용 부연구위원
차미숙 전 선임연구위원
김은란 선임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어디로 어떻게 확산되고 있나?

주요 내용

❶ 행정안전부 발표자료(2006~2024)에 의하면 2006년을 기준으로 외국인주민은 약 54만 명(총인구의 1.1%)에서 2024년 약 258만 명(5.0%)으로 늘었고,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시·군·구)은 2006년 8곳에서 2024년 142곳으로 증가

❷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2/3가 비수도권에 있어 공간분포가 역전되었으며, 수도권은 이미 형성된 집중거주지역이 유지되면서 규모가 커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신규 집중거주지역이 빠르게 늘어나며 확산 중

❸ 신규 집중거주지역은 각 권역의 관문도시(gateway city)에서 주변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따라 확산되며, 관문도시 기능이 약한 서남권은 지역별 산업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산

❹ 빈 일자리와 제조업 특화도가 높을수록 외국인주민 집중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노동시장 구조·산업입지·주거비용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❺ 142곳은 7개 유형으로 나뉘며, 수와 비율이 모두 높은 핵심지(유형1)는 5곳인 반면 99곳(약 70%)은 소규모 신흥 지역(유형7)으로 유형별 외국인주민 구성과 특화 산업이 상이

정책방안

❶ **(인식 전환)** 외국인주민을 정책 필요에 따른 관리 대상이 아닌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고, 생활 SOC 결핍도 등 공간 지표 산정 시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실거주 인구 기준 적용

❷ **(지원 정책·지정 기준)**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등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대상 중앙정부 지원사업(2008~2022년) 종료로 생긴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지정 기준에 성숙도·외국인주민 구성·산업 지표를 더해 시·군·구와 읍·면·동 2단계로 고도화

❸ **(부처 사업 연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기숙사·생활서비스 거점), 생활 SOC 확충, 노후주거지 정비(뉴:빌리지·도시재생) 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계획에 외국인주민 정주 수요 반영

❹ **(공간 특성별 맞춤 지원)** 권역별 확산 경로와 공간 유형을 반영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공간 특성에 맞춰 지원 내용을 차등화

01. 외국인주민 증가와 집중거주지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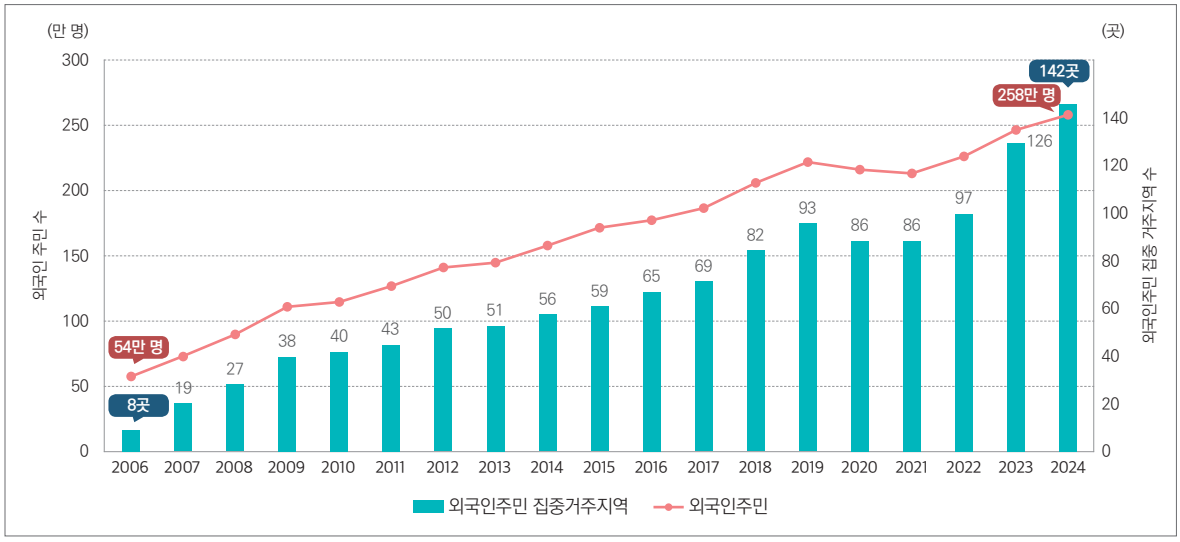
외국인주민 258만 명,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142곳(2024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024년 약 258만 명으로, 2006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행정안전부 2025)

- 2006년 약 54만 명(총인구의 1.1%)이던 외국인주민은 2009년 약 110만 명, 2024년 약 258만 명(5.0%)으로 약 4.8배 증가
- 외국인주민의 79.1%(2024년)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경제적 이주 중심의 초기 이민사회 모습이나, 2007~2024년 국적취득자 비중은 7.5%에서 9.5%로, 외국인주민 자녀 비중은 6.1%에서 11.4%로 높아져 일시 체류를 넘어 정착 단계로 진입
-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도 2006년 8곳에서 2024년 142곳으로 증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외국인주민이 1만 명 이상이거나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를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으로 분류

그림 1 외국인주민 수 및 집중거주지역 수 추이(2006~2024년)



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상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발표한 것은 2015년부터이며, 2006~2014년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역산한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2024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42곳(62.0%)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며, 외국인주민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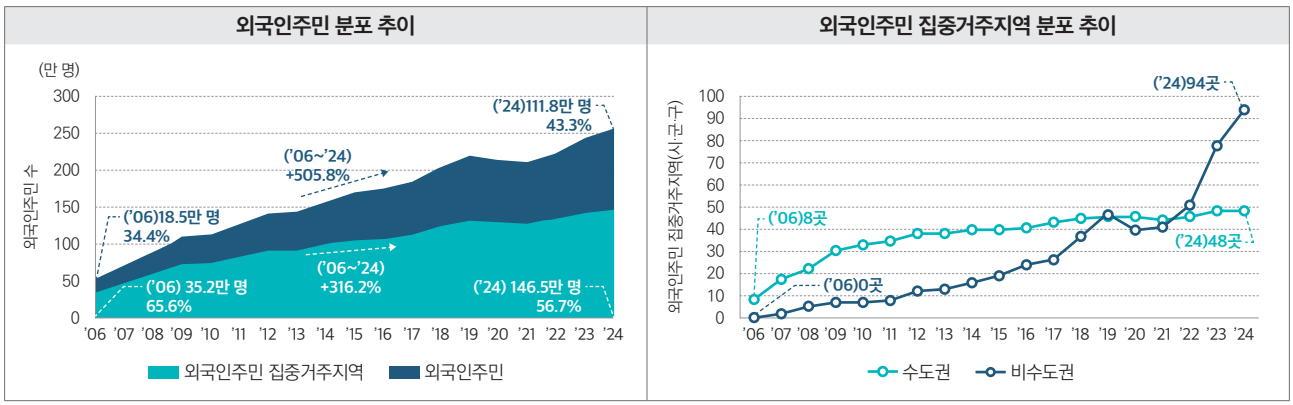
02.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시·공간적 변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수도권 정착과 비수도권 확산

2006년 8곳 모두 수도권에 있던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2015년 비수도권이 약 1/3, 2024년 약 2/3(94곳)를 차지하여 공간적 분포가 역전되었으며, 2025년 새로 집중거주지역이 된 12곳 중 10곳도 비수도권이 차지

- **(수도권 정착)**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48곳(73%)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며, 이 중 42곳(88%)이 2016년 이전에 편입(평균 경과연수 14.9년)된 지역으로 수도권 대부분에 자리 잡음

그림 2 수도권·비수도권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분포 추이(2006~2024년)



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상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발표한 것은 2015년부터이며, 2006~2014년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역산한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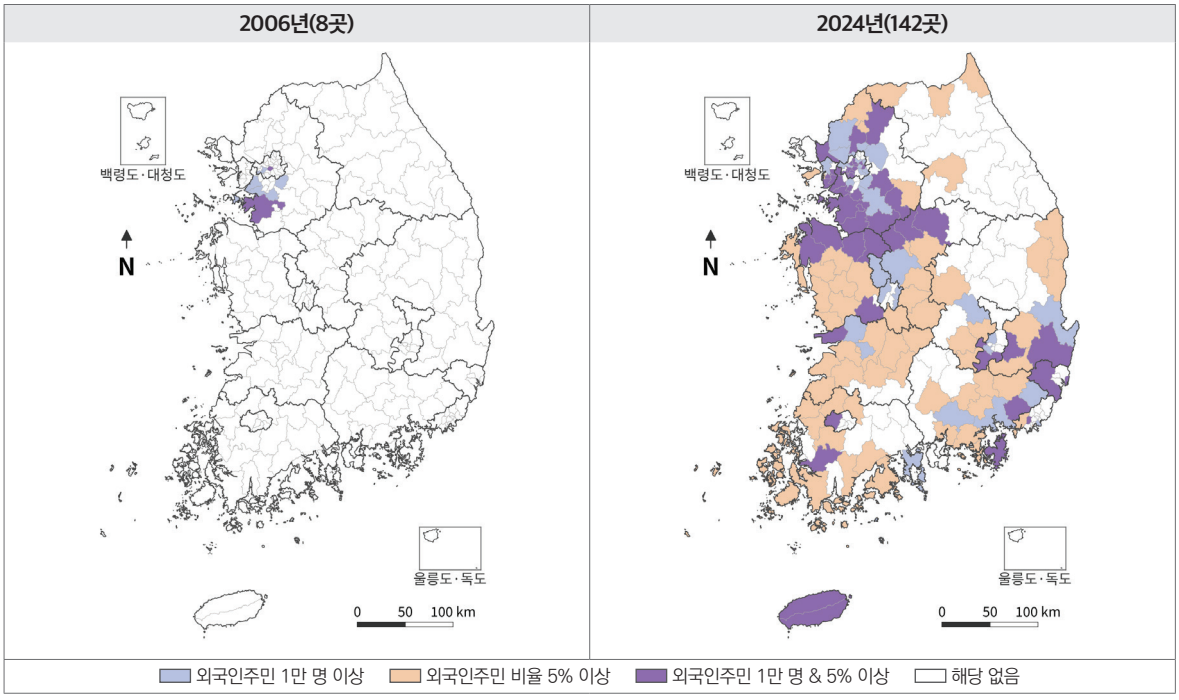
- **(비수도권 확산)** 94곳 중 70곳(74%)이 2016년 이후 편입(평균 경과연수 5.8년)된 곳으로, 성숙한 거점 도시와 신규 편입 농어촌이 혼재
- 외국인주민 분포도 수도권 비중이 2006년 65.6%에서 2024년 56.7%로 낮아진 반면, 비수도권 비중은 34.4%에서 43.3%로 높아져 수도권 집중이 점차 완화
- 2006~2024년 외국인주민 증가율은 비수도권(505.8%)이 수도권(316.2%)을 크게 웃돌았으며, 전기(2006~2015년, 256.6% 대 197.5%)와 후기(2015~2024년, 69.9% 대 39.9%) 모두 비수도권이 더 빠르게 증가

표 1 수도권·비수도권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분포 현황 변화(2006~2024년)

구분	2006년		2015년		2024년	
	지역 수(개)	평균 외국인주민 수(명)	지역 수(개)	평균 외국인주민 수(명)	지역 수(개)	평균 외국인주민 수(명)
전국	8	13,955	59	19,544	142	15,746
수도권	8	13,955	40	22,839	48	28,346
비수도권	0	-	19	12,608	94	9,267

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상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발표한 것은 2015년부터이며, 2006~2014년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역산한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공간분포 변화(2006년, 2024년)



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상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발표한 것은 2015년부터이며, 2006~2014년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역산한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03. 확산의 경로: 관문도시를 따라 퍼지다

관문도시에서 주변으로 이어지는 공간적 전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 된 지 오래된 지역일수록 외국인주민이 오래 정착해 온 성숙한 지역으로 보고, Singer(2008)의 관문도시(gateway city) 개념을 적용한 결과,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 확대되는 경로는 권역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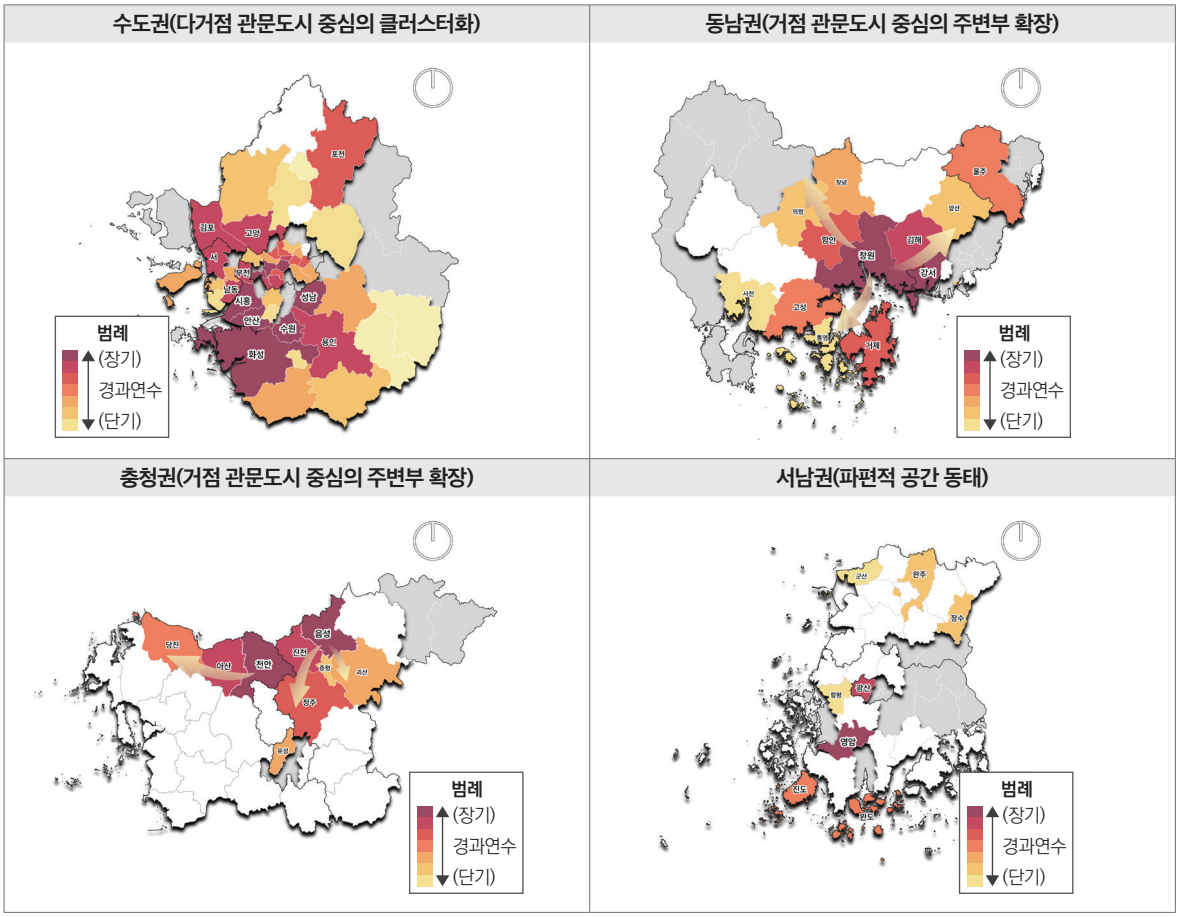
(① 다거점 관문도시 중심의 클러스터화) 수도권은 안산을 시작으로 시흥, 수원, 화성 등에 외국인주민 생활권이 각각 형성되어, 하나의 중심이 아닌 여러 관문도시가 공존하는 구조

(② 거점 관문도시 중심의 주변부 확장) 비수도권 주요 권역은 초기 관문도시를 기점으로 산업단지가 입지한 인접 도시와 농어촌 지역으로 확장

- **(동남권)** 비수도권 최초의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인 부산 강서·경남 창원(2007년)에서 김해, 함안 등 산업단지가 입지한 주변 시·군으로 확장
- **(충청권)** 충북 음성·충남 천안(2008년)에서 진천(2009년), 아산(2011년), 청주(2014년), 당진(2016년)으로 확대
- **(대구·경북권)** 서부는 대구 달서·경북 고령(2012년)에서 성주, 칠곡, 대구 달성으로, 동부는 경주(2014년)에서 포항, 영천(2018년)으로 확장되었고, 경산은 유학생 중심의 신흥 관문으로 기능

(③ 파편적 공간 동태) 서남권은 전남 영암(2009년)이 관문도시로 기능하지 못하고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67%(18곳)가 2020년 이후 편입되는 등 지역별 산업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장

그림 4 권역별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편입 시점별 공간적 분포 현황



주: 1)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상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발표한 것은 2015년부터이며, 2006~2014년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역산한 결과임.
2) 장기·단기 기준은 경과연수 평균(8.9년)을 기준으로 9년 이상(2016년까지 편입)과 8년 이하(2017년 이후 편입)으로 구분함.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04.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형성요인과 유형

형성요인: 노동시장·산업입지·주거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

외국인주민 집중도(외국인주민 수와 비율의 정규화 합성지표)와 지역 여건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주민 집중도는 노동시장 구조·산업입지·주거비용 관련 지표와 유의한 관계를 보임

- **(인구)** 수도권은 총인구·핵심생산인구 비율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순이동인구는 유의하지 않아, 외국인주민 유입이 인구 유출을 곧바로 상쇄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주택·소득)** 주택가격·가구소득은 수도권에서만 부(-)의 관계를 보여, 수도권에서는 주거비가 낮은 지역으로의 집중이 거주지 분리로 이어질 가능성
- **(고용·일자리)** 고용률, 일자리 수, 빈 일자리 수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빈 일자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 수준에서 유의
- **(산업구조)** 혁신·일반제조업 특화도는 정(+), 혁신·일반서비스업은 부(-)의 관계로, 제조업 특화 지역일수록 외국인주민 집중도가 높은 경향

표 2 외국인주민 집중도와 지역 여건 간 상관분석 결과(2024년 기준)[1)]

구분	지표	수도권(N=48)	비수도권(N=94)
인구	총인구 수	0.364***	0.074
	순이동인구(최근 5년 평균)	-0.037	0.063
	핵심생산인구 비율	0.274**	-0.001
주택·소득	주택가격	-0.218*	-0.124
	가구소득	-0.212*	-0.106
고용·일자리	고용률	0.230*	0.247***
	일자리 수	0.314**	0.152*
	빈 일자리 수[2)]	0.377***	0.229***
산업구조 (입지계수)	혁신제조업	0.528***	0.400***
	일반제조업	0.450***	0.622***
	혁신서비스업	-0.312**	-0.534***
	일반서비스업	-0.511***	-0.499***
	농림어업·광업	-0.026	0.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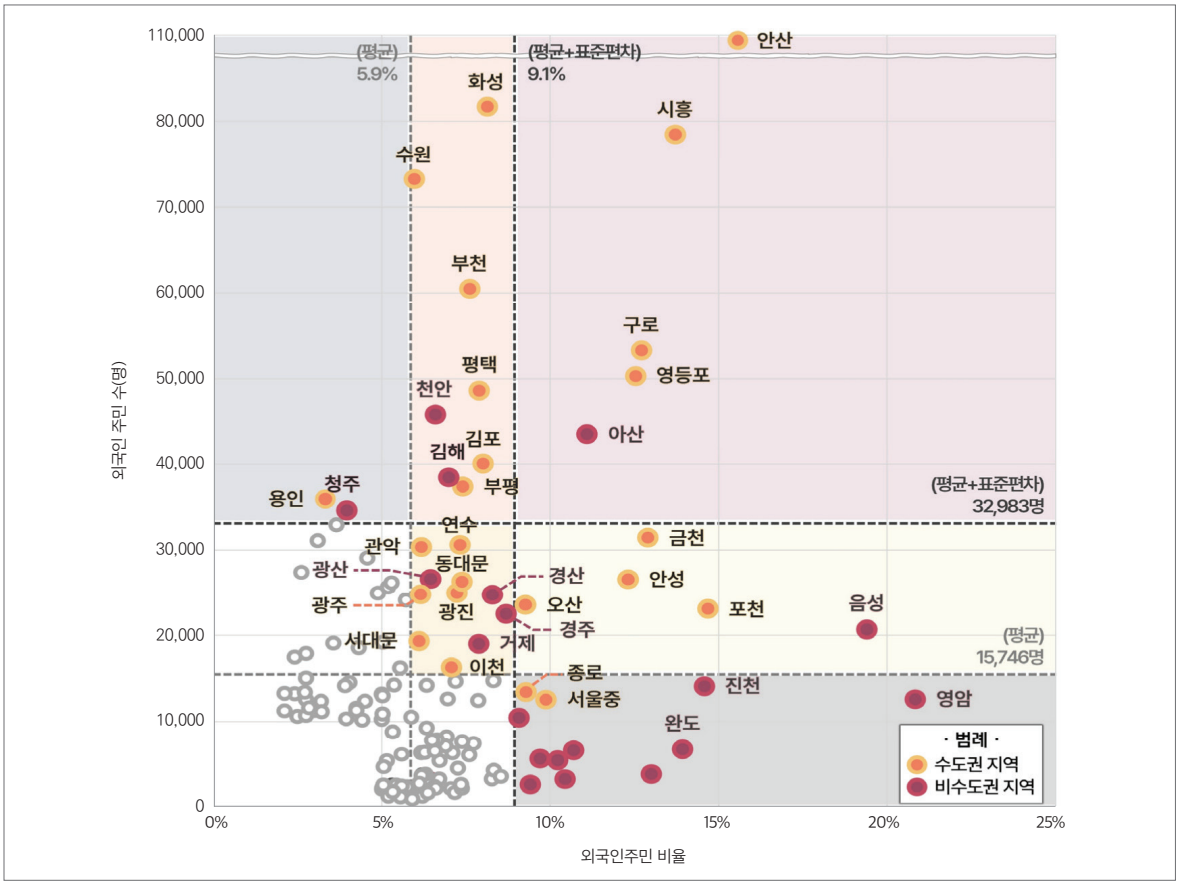
주: 1) 수치는 외국인주민 집중도와의 Pearson 상관계수이며, ***p<0.01, **p<0.05, *p<0.1임. 상관관계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음.
2) 빈 일자리는 조사 기준일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이내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로서 사업체가 구인활동을 하고 있는 일자리를 의미(고용노동부 2024).
자료: 고용노동부 2024; 국가데이터처 2024; 국토교통부 2025.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유형: 7개 유형으로 구분

외국인주민 수와 비율을 기준으로 142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7개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전통적인 수도권 핵심 집중지부터 비수도권 소도시·군급지의 신흥 집중지역까지 매우 이질적

- **(성숙·핵심형)** 유형1(안산·시흥·구로 등 5곳)은 외국인주민 수와 비율이 모두 높고 편입 후 18.0년이 지난 핵심지로 외국국적동포 비중(34.4%)이 가장 높으며, 유형2(화성·수원·천안·김해 등 8곳)는 성숙도가 높으면서도 2006년 이후 증가율(511.6%)이 가장 높은 대도시형
- **(기능 특화형)** 유형3(11곳)은 대학 소재지가 많아 유학생 비중(19.5%)이 가장 높고, 유형5(용인·청주)는 외국인주민 자녀(12.3%)와 결혼이민자(8.2%)가 주요 구성(1·2순위)으로 가족 단위 정주 거점의 성격
- **(산업 기반형)** 유형4(금천·포천·음성 등 5곳)는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모두 특화된 중소도시이고, 유형6(영암·진천·완도 등 12곳)은 외국인근로자 비중(29.6%)이 가장 높고 체류기간(4.3년)이 짧은 군 지역 중심형
- **(신흥 편입형)** 유형7(99곳)은 외국인주민 수 또는 비율이 평균 이하이나 2019년 이후 편입 지역을 모두 포함하며(평균 경과연수 6.5년), 외국인주민 구성의 장기 변화를 주시할 필요

그림 5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유형 분류 결과(2024년 기준)



주: 외국인주민 수(평균 15,746명, 평균+표준편차 32,983명)와 비율(평균 5.9%, 평균+표준편차 9.1%)을 기준으로 각각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유형을 구분함.
자료: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자료 중 2024년을 기준으로 저자 작성.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외국인주민 유입은 일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경제적 이주가 중심이며, 지역의 특화 산업에 따라 유형별 외국인주민 구성도 달라짐
- 혁신제조업이 특화된 대도시(유형2)는 외국인근로자와 국적취득자, 제조업과 농림어업·광업이 함께 특화된 중소도시(유형4)는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농림어업·광업이 특화된 군 지역(유형6)은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나타나, 유형별 정책도 지역 산업 여건과 연계하여 설계할 필요

표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유형별 주요 특성(2024년 기준)

구분	지역 수 (개)	외국인주민 수 (명)	외국인주민 비율(%)	경과연수 (년)	주요 구성(1·2순위)	특화 산업 (입지계수, 2023년)	주요 포함 지역
유형1	5	67,088(많음)	13.5(높음)	18.0	외국국적동포(34.4%) 외국인근로자(14.4%)	혁신제조업(1.48) 일반서비스업(1.00)	〔수도권〕 안산, 시흥, 구로 〔비수도권〕 아산
유형2	8	53,225(많음)	7.2(보통)	17.5	외국인근로자(21.5%) 국적취득자(10.2%)	혁신제조업(1.88) 일반제조업(1.34)	〔수도권〕 화성, 수원 〔비수도권〕 천안, 김해
유형3	11	24,133(보통)	7.0(보통)	13.3	유학생(19.5%) 외국인근로자(17.5%)	일반제조업(1.24)	〔수도권〕 연수, 관악 〔비수도권〕 경주, 거제
유형4	5	25,067(보통)	12.8(높음)	15.2	외국인근로자(25.8%) 외국국적동포(24.6%)	농림어업·광업(1.59) 일반제조업(1.53)	〔수도권〕 금천, 포천 〔비수도권〕 음성
유형5	2	35,300(많음)	3.6(낮음)	14.5	외국인주민 자녀(12.3%) 결혼이민자(8.2%)	혁신제조업(1.62) 혁신서비스업(1.04)	〔수도권〕 용인 〔비수도권〕 청주
유형6	12	8,089(적음)	11.4(높음)	11.8	외국인근로자(29.6%) 외국국적동포(9.2%)	농림어업·광업(1.42) 일반서비스업(1.26)	〔수도권〕 종로 〔비수도권〕 영암, 진천, 완도
유형7	99	9,255(적음)	4.2(낮음)	6.5	외국인근로자(21.5%) 외국인주민 자녀(13.7%)	농림어업·광업(1.27) 혁신서비스업(1.07)	-

주: 경과연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편입 후 경과연수의 평균이고, 주요 구성은 외국인주민 유형별 비중의 1·2순위이며, 특화 산업은 2023년 기준 입지계수(LQ)가 1 이상인 산업 중 상위 2개임. 입지계수는 지역의 산업 비중을 전국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전국 평균보다 해당 산업이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연도별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05.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대응방향 ①: (인식 전환) 외국인주민을 지역 주민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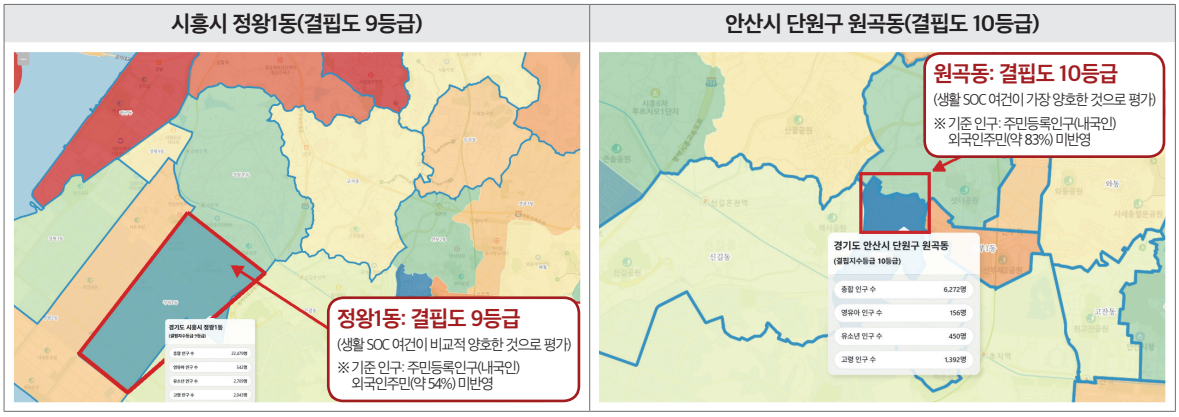
(정책 대상에서 지역 구성원으로) 외국인주민을 지방소멸 대응이나 인력 수급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만 다루지 말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등록외국인을 생활인구*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생활 SOC 결핍도 등 공간 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여전히 주민등록인구(내국인)만으로 산정하여 외국인주민의 생활 수요가 공간 정책에서 누락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가. 주민등록인구, 나. 체류인구, 다. 외국인(등록외국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을 포함

- 외국인주민이 많은 지역일수록 생활 SOC의 실제 수요보다 공급 수준이 과대평가되므로(예: 시흥시 정왕1동 9등급,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10등급), 공간계획과 지표에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실거주 인구 기준을 적용할 필요

그림 6 내국인 중심의 생활 SOC 결핍도 산정(외국인주민 수 미반영)



주: 생활 SOC 결핍도 산정 기준 인구에 외국인주민이 반영되지 않음. 결핍도는 10등급에 가까울수록 생활 SOC 여건이 양호함을 의미함.
자료: 국토연구원. 지역별(읍면동) 생활 SOC 상대적 결핍도. https://interactive.krihs.re.kr/interactive/multipleDeprivationIndex?lang=ko (2026년 3월 30일 검색).

대응방향 ②: (중앙정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정책 추진과 지정 기준 고도화

(통계 발표에서 지원 정책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승인통계로 매년 발표하며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분류하고 있으나, 통계상 분류에 따른 별도 지원은 없어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추진을 고려

- 2008~2022년 추진된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생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종료된 이후,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공간을 정비·지원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수단이 사실상 부재
- 지자체가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

(지정 기준 고도화) 현행 기준(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비율 5% 이상)에 성숙도·외국인주민 구성·산업 지표를 더하고, 시·군·구와 읍면동의 2단계로 지정 체계를 개선

- 외국인주민 증가로 시·군·구의 62%가 지정되어 변별력이 약해진 반면, 읍면동 비율이 5%를 크게 넘어도 시·군·구 평균에 가려 제외된 곳이 243곳(예: 대전 동구 자양동 35.8%, 경북 상주시 화동면 19.75%, 부산 동구 초량1동 19.26%, 2023년)

대응방향 ③: (관계 부처) 산업단지·생활 SOC·노후주거지 사업과의 연계

(부처 사업에 정주 수요 반영)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을 축으로 산업단지, 생활 SOC, 노후주거지 정비 등 관련 부처 사업에 외국인주민의 정주 수요를 반영하여 공간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주거·편의시설 복합개발을 도입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정주 공간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기숙사·생활서비스 거점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
- **(생활 SOC)** 생활 SOC 확충 사업의 대상지 선정과 시설 계획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내 생활권 수요를 반영
- **(노후주거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산업단지 배후와 도심 노후 주거지에 주로 형성되므로, 국토교통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뉴:빌리지)·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외국인주민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실거주 여건을 평가에 반영

대응방향 ④: (지원 방식) 공간 특성별 맞춤형 지원

(공간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마련)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권역별 확산 경로와 공간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반영한 공간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내용을 차등화

-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 공간계획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공간 특성과 확산 전망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공간계획 수립을 검토
- 수도권 기존 집중거주지역은 정주여건 개선, 비수도권은 관문도시 거점 기능 강화와 신규 편입 지역의 기초 생활 인프라 선제 확충 등 공간 유형별로 지원 내용을 달리하는 맞춤형 지원 필요

표 4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유형별 정책 지원 방향(안)

유형	주요 특성	정책 지원 방향(예시)
성숙·핵심형(유형1·2)	동포·근로자 중심 제조업 특화 대도시	노후주거지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
기능 특화형(유형3·5)	유학생, 결혼이민자·자녀 중심	대학가 주거 지원, 가족 단위 보육·교육 서비스
산업 기반형(유형4·6)	외국인근로자 중심 제조업·농림어업 특화	산업단지·농공단지와 연계한 기숙사 생활서비스 거점
신흥 편입형(유형7)	소규모, 최근 편입지역	변화 모니터링, 기초 생활 인프라 선제 확충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4. 사업체노동력조사. 세종: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2024.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대전: 국가데이터처.

국토교통부. 2025. 개별주택가격정보.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지역별(읍면동) 생활 SOC 상대적 결핍도. https://interactive.krihs.re.kr/interactive/multipleDeprivationIndex?lang=ko (2026년 3월 30일 검색).

행정안전부.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 현황 [데이터 세트].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tblId%3DTX_11025_A001_A%26orgId%3D110%26 (2026년 11월 18일 검색).

Singer, A. 2008. Twenty-First-Century Gateways: An Introduction. In *Twenty-First Century Gateways: Immigrant Incorporation in Suburban America*, (Eds.) Singer, A., Hardwick, S. W., and Brettell, C. B.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유희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044-960-0553)
- **김찬용**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chanyongkim@krihs.re.kr, 044-960-0158)
- **차미숙** 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
- **김은란**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erkim@krihs.re.kr, 044-960-0688)
- **조은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문연구원(ejcho@krihs.re.kr, 044-960-0255)

※ 이 브리프는 "유희연, 차미숙, 김은란, 김찬용, 조은주. 2026.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 특성과 지역사회통합 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의 제3장과 제6장을 요약·정리한 것임.

※ 이 브리프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

KRIHS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홈페이지 www.krihs.re.kr

ISSN 3091-745X